

3일 Market Index			
↑ 코스피	2441.92	↑ 코스닥	705.76
	(+42.98)		(+19.13)
↓ 금리 (연율)	2.482	↑ 환율 (원/달러)	1469.70
	(-0.025)		(+3.10)

# metro 경제

제주항공 참사  
여야  
특별법 제정 한뜻  
03



2002년 5월 31일 창간 독자센터 (02)721-9841 구독료: 월 20,000원 / 1부 1,000원 뉴메트로 10주년 대한민국 희망을 찾아서 2025년 1월 6일 월요일

## 분열·대립 정국에 방치된 사회·경제

2025 신년기획  
격동의 한국 생존 넘어 도약  
양극화 수렁 - 정치

지난 1970년대 말, 아이들은 검은색 리본을 왼쪽 가슴에 달고 다녔다. 조그만 유치원생들까지 영문도 모른 채 한 동안 달고 등원했다. 그 10·26 사태에 이어 또 하나의 군부독재가 생겨났다. 이후 1987년 6월 민주항쟁을 거쳤으나 군인출신 정치는 1993년 김영삼 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 지속됐다.

하지만 이 문민정부의 탄생은 노태우 정권과의 야합에서 비롯됐다는 오명을 벗기 어려웠다. 1990년대 중반을 넘어서며 나라는 이른바 IMF 위기(1997년 외환위기)를 맞았고 정권은 교체됐다. 야합의 최대 피해자이자 군정의 대적점에 섰던 김대중 전 대통령이 집권했다.

한반도 정치지형 양분 심화  
지역주의 기반 정치보복 난무  
제왕적 대통령제 개헌 불지퍼  
정치갈등 속 사회·경제 뒷전  
세대·남녀·집값 편차 심화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를 지나며 우리나라 정당체제는 양당제가 굳어지는 양상을 보였다. 검정 리본을 달던 아이들은 보수와 진보, 또는 좌파와 우파 중에 1개만을 선택해야 했다. 시대의 흐름이었다.

이 과정에서 한반도 정치지형이 동서로 양분되는 지역주의는 심화했다. 양당의 기반이 각각 한쪽은 영남, 한쪽은 호남이기 때문에 그랬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서거했고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은 수감됐다. 정치보복이 난무했다. 한편으로 중도를 표방하는 정당이나 노동자 이익을 내세우는 정당 등이 점차 실 곳을 잃어 갔다. 상대편에 지면 끝장이라는 인식이 대두됐고 제3당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여력이 없었다.

지난 30~40년 사이 어렵사리 얻어낸 민주주의임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전 세계가 주목하고 칭송한다. 하지만 군부가 자취를 감춘 자리에 지난 20~30년 사이 또 다른 난제가 자리잡은 것도 사실이다. 호남 대 영남, 강남 대 강북,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대결 구도다. 무엇보다 진영논리가 상대를 헐

뜯고 또 헐뜯었다.

◆ 혼돈의 시대, 개헌론 다시 수면 위

한 달 전 12·3 계엄 사태가 한반도를 뒤흔들었다. 이후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말들이 많다. 이를 기회로 개헌을 적극 논의해야 한다고 말한다. 우리 정치사에서 위기 때마다 내각책임제(의원내각제)와 4년 중임제 등이 줄곧 거론되곤 했다. 그리고 새 정부가 들어서면 늘 흐지부지됐다.

이번에도 차기 대선 잠룡으로 꼽히는 인물 중 일부가 개헌론에 불을 지피고 있다. 이에 대해 최근 대통령리더십연구원 원장은 지난달 하순 한 TV프로그램에 출연해 “(대선 잠룡 또는 정치인) 이 시기에 개헌을 언급할 수 있다”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식의 개헌을 추구하는지 제시해줬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최수영 정치평론가도 개헌론이 이 같은 시국에 등장하는 것은 자연스럽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그는 보수진영뿐만 아니라 우원식 국회의장(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개헌의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다고 전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대통령중심제를 유지하되 5년 단임제의 4년 중임제 변경을 제시한 바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지난달 23일 “승자독식의 의회 폭거와 제왕적 대통령제를 허용하는 이른바 87헌법체제의 한계를 인정해야 한다”고 SNS에 썼다.

그는 “위기를 기회로 삼아 정치권 전체가 개헌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앞서 지난달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대통령 중심제가 과연 우리 현실과 맞는지 검토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대한민국헌정회 소속 정치원로들의 경우, 지난 24일 “총체적 난국 돌파를 위해 국민 총의를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것은 개헌”이라며 ‘선 개헌, 후 대통령 선거’를 제안했다. 헌정회는 대통령 4년 중임제와 제왕적 대통령 권한 분산, 국회의 민주성 강화를 위한 양원제(상·하원 또는 참·중의원 등), 지방분권 신장 등을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한 언론매체의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5분의 3이 ‘개헌이 필요하다’라고 답했다. 전체 응답자의 45%가 4년 중임제를, 15%는 내각책임제를 선호한다고 답했다. 개헌 여부는 국민투표를 거쳐야 한다.

(2면에 계속)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 韓 증시 궤조 출발했지만 방향성 오리무중

정국 불안에도 증시 반등세 이어져  
외국인 매수세, 상승여력 확대 주목

코스피의 2440선 회복과 함께 반등 기대감이 커지는 가운데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 증시 복귀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다만 정국불안 속에서 기업 실적 둔화, ‘트럼프리스크’ 등 대내외적 리스크가 여전하다는 신중론도 적지 않다.

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4일부터 5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보이던 코스피가 3일 전 거래일 대비 1.79% 급등한 2441.92에 장을 마쳤다. 이날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시도

움직임을 보이자 증시 상방 압력이 높아지면서 2454.67까지 올랐으나, 체포영장 집행 시도 중단 소식에 상승 폭을 줄이며 마감했다. 이날 코스닥은 3일째 연속 상승하며 지난해 11월 12일 이후 약 2개월여 만에 700선을 회복한 705.76에 마감했다.

정국 안정을 기대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반등 흐름을 유지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말부터 3거래일 동안 순매도세를 보이던 외국인들은 이날 코스피에서 2847억원을 사들였다.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이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 연속 순매도세를 지속하고 있는 만큼 외국인 투자자들의 복귀가 국내 증시에 큰 영

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조준기 SK증권 연구원은 “원화의 달러 대비 급격한 절상이 아직까지 나타나고 있지 않으나 외국인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자 국내 증시도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다”며 “이날 나왔던 패턴처럼 외국인이 매수세로 전환하면 이를 매도로 누를 주체가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가격 반응이 폭발적으로 나올 수 있다”고 내다봤다. 지난해 코스피 외국인 지분율 고점이었던 7월 초 35%에서 현재 31%까지 빠진 상황인 만큼 외국인 수급이 채워지면 만들 수 있는 상승 여력도 크다는 분석이다.

(2면에 계속)

/신하은 기자 godhe@



尹 대통령 체포영장 시한 D데이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영장 집행 시한을 하루 앞둔 5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출입구를 막아선 차벽 앞에 경비병력이 모여 있다.

/뉴시스

## 서울시, 주상복합 상가비율 연면적 10%로 완화

市, 규제 철폐 1·2호 발표  
환경 영향 평가 협의 기간  
기존 48일서 20일로 단축

서울시는 규제 철폐 1·2호 과제로 상업·준주거 지역 내 주거 복합 건축물의 주거 외 용도 비율 완화, 사업 기간 단축을 위한 환경 영향 평가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우선 시는 규제 철폐 1호 과제로 상업·준주거 지역 내 비주거 시설 비율을 폐지 및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서울 도심 상업 지역 내 주거 복합 건축물의 비주거 시설(공동주택과 준주택을 제외한 시설) 비율은 도시 계획 조례상 연면적 20% 이상이며, 준주거 지역은 지구 단위 계획 수립 지침에

의해 용적률의 10% 이상으로 설정돼 있다.

시 관계자는 “최근 대형 복합 쇼핑몰 이용이 많아지고 온라인 쇼핑으로 소비 패턴이 변화함에 따라 상가 공실이 증가하고, 도심 내 주택 수요도 지속적으로 늘면서 과감한 제도 개혁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시는 올해 상반기 중 도시 계획 조례를 개정해 상업 지역 내 주거 복합 건축물의 비주거 시설 비율을 연면적 20%에서 10%로 낮출 예정이다. 또 일반·근린 상업 지역에 임대주택이나 공공기숙사를 도입하면 주상 복합이 아닌 주택 100% 단일 공동 주택도 허용키로 했다. 조례안의 영향을 받지 않는 준주거 지역 내 주거 복합 건축물 비주거 시설

에 대한 용적률 10% 규제는 이달 중 서울시 지구 단위 계획 수립 기준을 고쳐 즉시 폐지할 것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규제 철폐 2호 과제는 ‘환경 영향 평가 본안 평가 면제 대상 확대와 절차 완화’다. 시 관계자는 “환경 영향 평가는 소음 진동, 분진 피해로부터 시민 불편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지만 건설 업체 입장에서는 사업 추진 지연 등의 차질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시는 그간 사문화됐던 ‘협의 절차 면제 제도’를 되살려 심의 기준 준수 사업은 본안 심의를 생략해 환경 영향 평가 협의 기간을 기존 48일(초안 20일+본안 28일)에서 절반 이하인 20일(초안)로 대폭 줄이기로 했다.

/김현정 기자 hjk1@

### 메트로 한줄뉴스



▲민주 “與 ‘내란죄 불성립’ 주장은 정신착란적… 권성동 뺨뺨”  
▲오세훈, 탄핵소추단의 탄핵 ‘내란죄’ 철회에 “이재명 집권 위한 정치적 셈법”

/사진 뉴시스

▲홍준표 “현재 날치기尹 탄핵심리…朴 때도 집단광기 떠올려”  
▲경호처, ‘공수처에 발포 명령’ 野 주장은 허위… 법적 대응 예고

▲주한중국대사관 “한국 거주 중국인에 정치활동 참여할 것 당부”  
▲해군, 2025년 첫 해상훈련… 동·서·남해 전 해역 군사대비태세 점검